폭증 택배에 하루 14시간 노동… 이대론 안된다

시급한 택배노동자 안전 대책

월별 물량 최대 8천만개 급증…분류작업까지 떠맡아

식사시간도 부족…상반기 8명 과로사·월 1명 꼴 사망

지난 10월 민주노총 택배노조가 CJ 대한통운 소속 택배 기사 김모씨의 사망 사건을 전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김씨는 하루 평균 14시간 이상 일하며 400여건의 물량을 배송했다. 지병이 없었던 김씨의 죽음은 업무 과중에 의한 과로사로 추정된다.

"편의점에 집화(集貨)하러 왔다가 컵라면으로 점심 먹습니다."

"하루에 평균 14시간 일을 하는데 짧게는 5시간, 길게는 7시간, 8시간씩 돈도 못 받고 무임금으로 (분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일을 한 번 따라갔는데 아무리 택배 기사가 개인 사업자라지만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최소한의 밥 먹을 수 있는 시간이라도 줘야 할 것 아니냐."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택배 , 배달 같은 생활 물류 서비스 시장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지만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은 듯하다. 코로나19 상황이 본격화한 지난 2월 이후 월별 택배 물동량은 적게는 3천만개, 많게는 약 8천만개 가까이 늘었다.

택배 노동자들은 대개 주 6일 근무하는 사람이 많다. 노동시간은 하루 최소 9.5시간에서 최대 12.7시간이다. 코로나19로 업무량은 예년에 비해 30% 이상 증가한 상태다.

컵라면, 빵, 김밥 같은 간편식으로 식사를 대체하거나 아예 식사를 하지 못한다. 배송 물량을 약속한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동을 하고도 이들의 노동시간 대비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택배 노동자 8명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죽음을 맞았다.

모두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 남성으로, 일하거나 휴식을 취하다 쓰러져 돌연사했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된 이유에는 '힘들어도 스스로 멈출 수 없는' 택배 노동의 특성이 자리잡고 있다. 택배노조는 "제대로 된 휴식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몸이 안좋아 쉬려고 하면 해고 위협을 당하고, 배송비보다 2~3배 비싼 비용으로 대체 배송을 강요한다." 고 주장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택배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있다. 택배 노동자들은 산업재해 고위험 속에서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어서 고용, 안전, 휴식 등에서 노동권을 보장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폭증한 업무량과 일상화된 야간, 초과 근무가 이들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

장시간 노동은 '공짜 분류작업' 투입과 적은 수수료로 인한 과다물량 배송 등이 원인이다. 최근 택배 노동자과 언론의 체험취재에 따르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내린 거리가 하루 평균 20km에서 많게는 30km에 달하며 층수로는 81층 건물을 왕복했다고 한다.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택배 노동자의 주간 평균 노동시간은 71.3시간으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하루에 400개 택배 물량을 분류하고 배송하는데 대략 18시간의 소요된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택배 노동자 노동의 약 54%가 까대기(간선 차량이 내려놓는 택배를 지역별로 분류하고 트럭에 실어 정리하는 업무) 업무가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또 다른 택배 노동자가 과로로 인해 쓰러질 것" 이라고 경고하며 분류 작업 인력 투입에 대해 이들은 "정부와 택배 업계가 약속한 조치는 미흡했다.

정부에서 매일 매일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택배 업계가 전달하는 거짓 정보를 그저 취합만 할 뿐, 현장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택배 물동량의 증가로 연이은 산업재해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택배 회사들은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으며, 과로사에 대한 책임 회피에만 몰두하고 있다.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시간에 대한 보상은 물론 택배 노동자는 죽어서도 산재처리마저 받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쇼핑이 갈수록 확대되는 코로나 시대, 택배는 소중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와 그 원인을 알게 되면서 택배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택배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이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라고있다.

송선경 학생기자

온라인 쇼핑 폭증으로 택배 물량은 폭증했지만 노동대책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택배기사들의 과로사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택배기사 산재보험 가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

지난 10월 12일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김모(36)씨가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김씨는 숨지기 4일 전 새벽에 동료에게 "너무 힘들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집에 가면 5시다. 밥 먹고 씻고 터미널 가면 한숨도 못자고 또 물건 정리해야 한다"며 "어제도 2시에 집에 도착 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본 사건에 대해 한진택배 측은 김씨가 과로가 아닌 지병 때문에 숨졌다고 주장하지만,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는 "김씨는 36세의 젊은 나이로, 지병이 없었으며 의문의 여지가 없는 과로사" 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노동부의 택배사 들에 대한 조사결과,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처우가 매우 부당한 것이 드러났다.

최근 잇따라 숨진 CJ대한통운, 한진택배 기사 9명이 모두 입직신고조차 되지 않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업무 특성상 다칠 위험이 높지만 보상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니다, 택배기사의 주 업무는 택배배송, 배송 1건당 급여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택배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드러나자 CJ대한통운은 "내년 상반기까지 택배기사 전원이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분류작업에 추가로 인원을 투입해 업무 부담을 덜어낼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택배사 들의 대처는 급한 불을 끄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와 처우 개선은 물론, 전체적인 택배구조 인프라 개선과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유비 학생기자

치킨집 사장 울리는 수수료, '공공배달앱'이 답

군산 '배달의 명수' 성공사례

경북·경기 등 전국 곳곳 도입

"우리가 어떤 민족이에요?"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바로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달 앱에서 광고카피로 쓰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는 배달 앱이 없던 시절을 떠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배달 앱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앱에는 명과 암이 존재한다.

밝은 면은 어플 주문을 통해 간편하게 주문 및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 어두운 면은 배달앱 수수료와 광고비가 영세업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정도로 비싸다는 점이다.

현재 소상공인들은 배달앱 시장이 독과점 형태여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를 부담하면서라도 배달앱에 입점하고 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배달앱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군산시에서 만든 공공배달앱인 '배달의 명수'가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4월 2일까지 1억 2700여만 원에 해당하는 5천344건의 주문을 처리할 정도로 인기몰이 중이다. 출시 후 첫 주말 이틀간 하루 평균 242건이던 주문은 보름 만에 355건으로 50%가량 증가했다.

경북도 역시 군산시의 사례를 참고해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배달앱을 개발하고 있다. 사업자는 공공배달앱을 3무(가입비'수수료'광고료 없음)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고, 소비자는 가입 축하 포인트,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시 10% 할인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경기도의회는 배달 플랫폼 거래를 이용하는 이용 사업자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광고비, 수수료 과다 및 불합리한 정산 절차 등)를 없애기 위해 경기도 유통 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재정하고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배달앱 개발에 나섰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은 11월 중으로 화성, 오산, 파주를 시범지역으로 선정, 3곳에서 공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고, 이르면 2022년 상반기에는 참여 의사를 밝힌 경기도의 모든 지자체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산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에서 만든 공공배달앱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서로 win-win 함과 동시에 지역 경제를 자연스레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우리 광주시도 지역민들을 위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장지영 학생기자